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조사」 결과 보고

2019. 2. 22.

I. 정책미래 선호도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여,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산하 정책 연구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환경변수를 연구하고 있음.
- 빅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미래결정 변수 분야를 체계화 하고, 13개 분야별로 2050년 시나리오를 연구함으로써 위험한 미래로 갈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로 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함
 - ☞ 본 조사는 분야별로 발굴된 정책 과제에 대한 장단점, 부작용, 대안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조사 설계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 65세 이하 전국 남녀
표본설계	자치구별/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할당표집
조사방법	엠브레인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web survey
조사규모	총 3,000명 (가 타입 1,500명, 나 타입 1,500명)
조사내용	미래에 대한 인식, 분야별 정책에 대한 선호도 등
조사기간	2019년 1월 18일 ~ 1월 22일 (총 5일)

주요 조사 항목

기후와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	가 타입
환경정책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나 타입
인공지능 의사결정	인공지능에 활용 제한 문제	가 타입
빅데이터의 활용	빅데이터의 활용 제한 문제	가 타입
인간 존엄과 생명기술	바이오 기술과 인간 존엄/가치 문제	나 타입
우주개발	우주기술 개발/투자 문제	나 타입
식량자원정책	GMO 등 허용 문제	가 타입
외교안보정책	동북아(한중미일) 관계	가 타입
복지 및 노동정책	양극화 등을 고려한 복지정책	나 타입
	인공지능과 노동 정책	나 타입
부동산정책	부동산 자산 불평등 문제(토지공개념)	가 타입
인프라정책	인구감소와 인프라 투자	나 타입
가족제도	새로운 생활공동체 문제	가 타입
이민정책	외국인 근로자 등 이민정책	나 타입
정치 갈등	새로운 사회/문화 갈등 방향	가 타입
지방분권	지방자치강화	나 타입
안락사	안락사 허용 문제	가 타입

I. 정책미래 선호도 조사 개요

2. 표본의 특성

“가” 타입		사례수(명)	비율(%)
■ 전체 ■		(1500)	100.0
성별	남자	(764)	50.9
	여자	(736)	49.1
연령별	15~18세	(87)	5.8
	19~29세	(295)	19.7
	30대	(285)	19.0
	40대	(340)	22.7
	50대	(336)	22.4
	60~65세	(157)	10.5
지역별	서울	(294)	19.6
	경기/인천	(469)	31.3
	대전/세종/충청	(154)	10.3
	광주/전라	(144)	9.6
	대구/경북	(146)	9.7
	부산/울산/경남	(230)	15.3
	강원/제주	(63)	4.2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73)	11.5
	200~400만원 미만	(481)	32.1
	400~600만원 미만	(446)	29.7
	600~800만원 미만	(224)	14.9
	800만원 이상	(176)	11.7
직업	화이트칼라	(696)	46.4
	블루칼라	(206)	13.7
	자영업	(102)	6.8
	주부	(189)	12.6
	학생	(196)	13.1
	무직, 기타	(112)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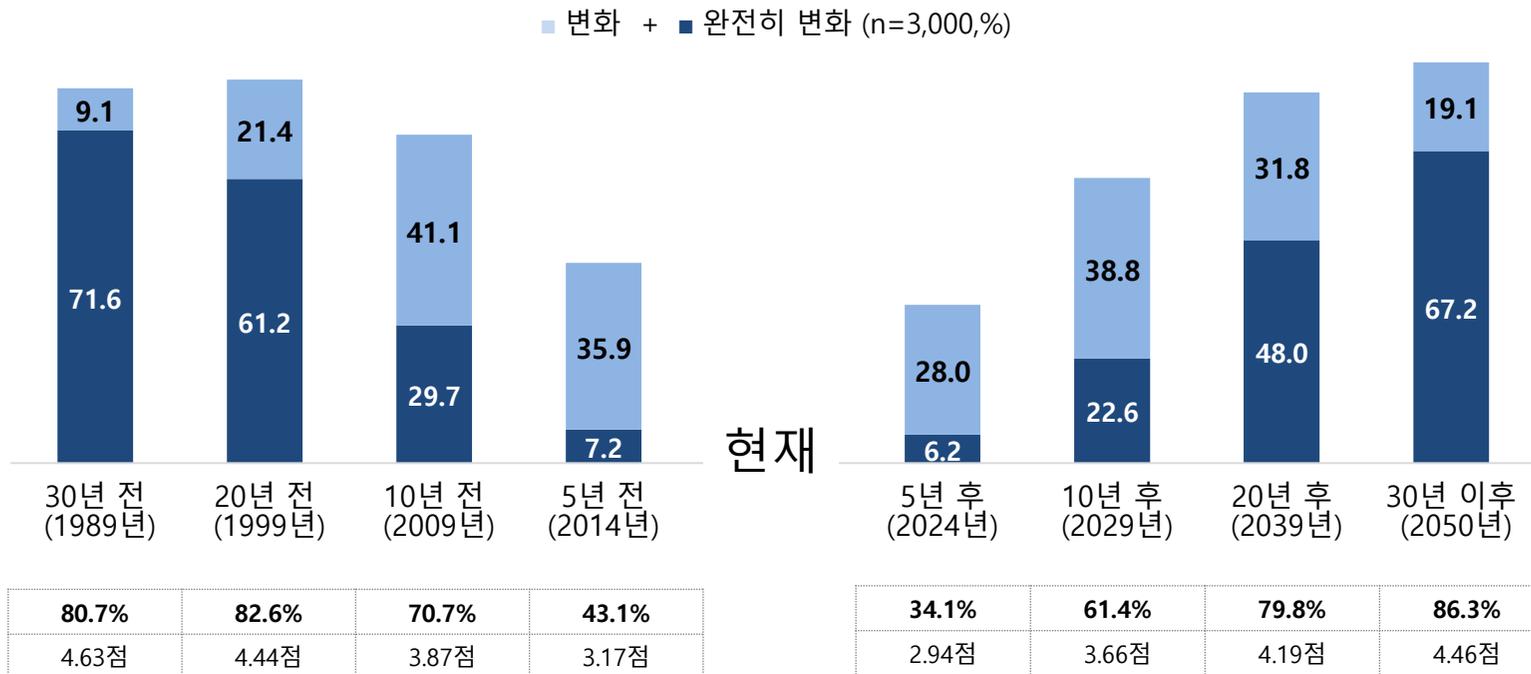
“나” 타입		사례수(명)	비율(%)
■ 전체 ■		(1500)	100.0
성별	남자	(764)	50.9
	여자	(736)	49.1
연령별	15~18세	(87)	5.8
	19~29세	(295)	19.7
	30대	(285)	19.0
	40대	(340)	22.7
	50대	(336)	22.4
	60~65세	(157)	10.5
지역별	서울	(294)	19.6
	경기/인천	(469)	31.3
	대전/세종/충청	(154)	10.3
	광주/전라	(144)	9.6
	대구/경북	(146)	9.7
	부산/울산/경남	(230)	15.3
	강원/제주	(63)	4.2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68)	11.2
	200~400만원 미만	(504)	33.6
	400~600만원 미만	(450)	30.0
	600~800만원 미만	(208)	13.9
	800만원 이상	(171)	11.4
직업	화이트칼라	(679)	45.3
	블루칼라	(221)	14.7
	자영업	(99)	6.6
	주부	(177)	11.8
	학생	(194)	12.9
	무직, 기타	(130)	8.7

Ⅱ. 주요 조사 결과

1. 변화에 대한 인식

문. 선생님께서는 '과거'에 비해 우리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모습 전반의 변화가 크다고 생각할 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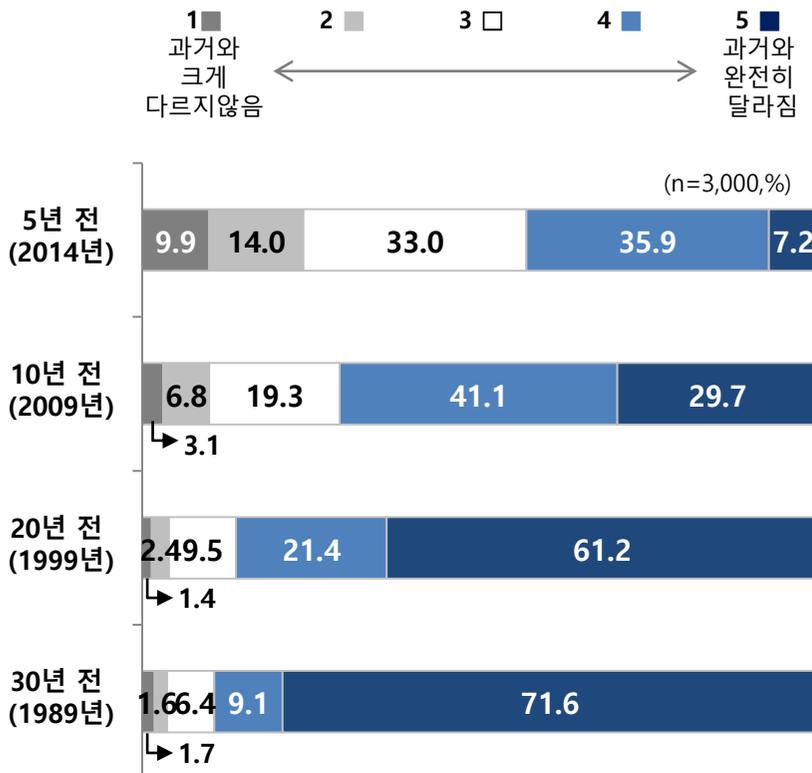
문. 선생님께서는 '미래'에 우리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모습 전반적으로 크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될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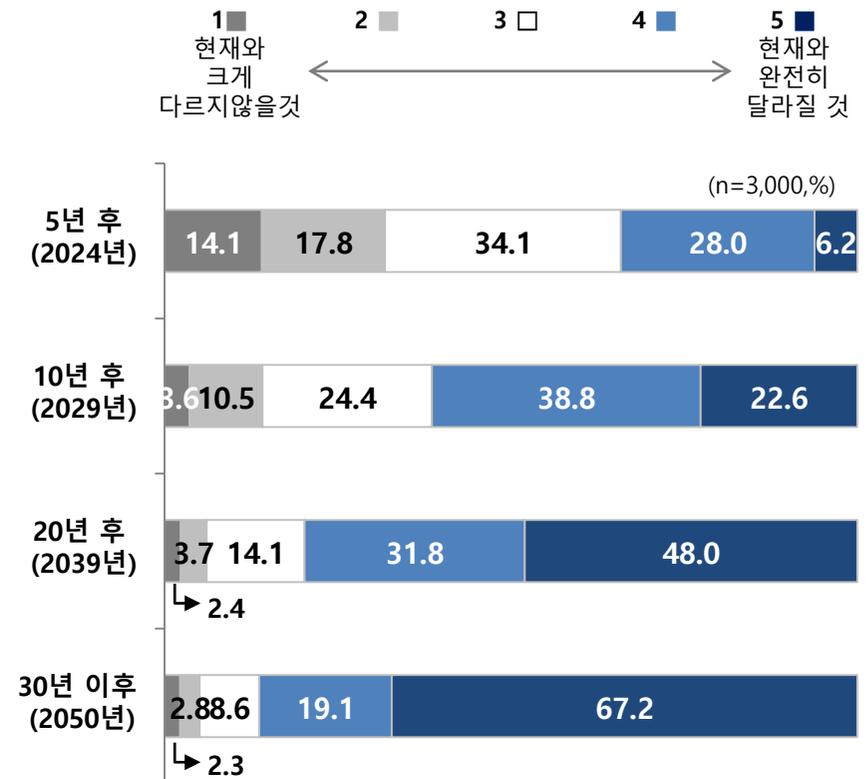
II. 주요 조사 결과

1. 변화에 대한 인식

문. 선생님께서는 '과거'에 비해 우리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모습 전반의 변화가 크다고 생각할 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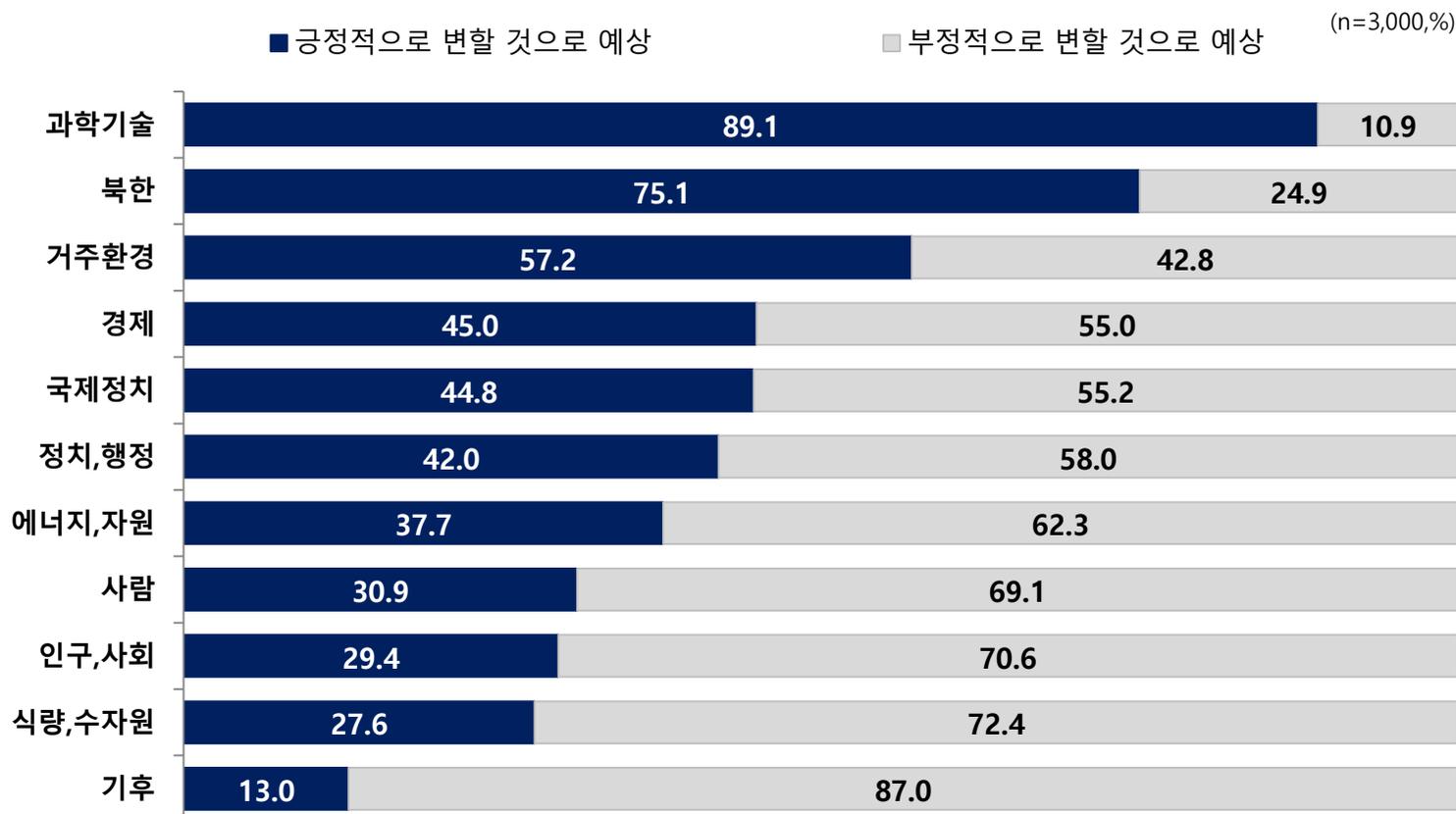
문. 선생님께서는 '미래'에 우리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모습 전반적으로 크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될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Ⅱ. 주요 조사 결과

2. 30년 후, 분야별 변화 예상

문. 선생님께서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하여 한국의 미래를 각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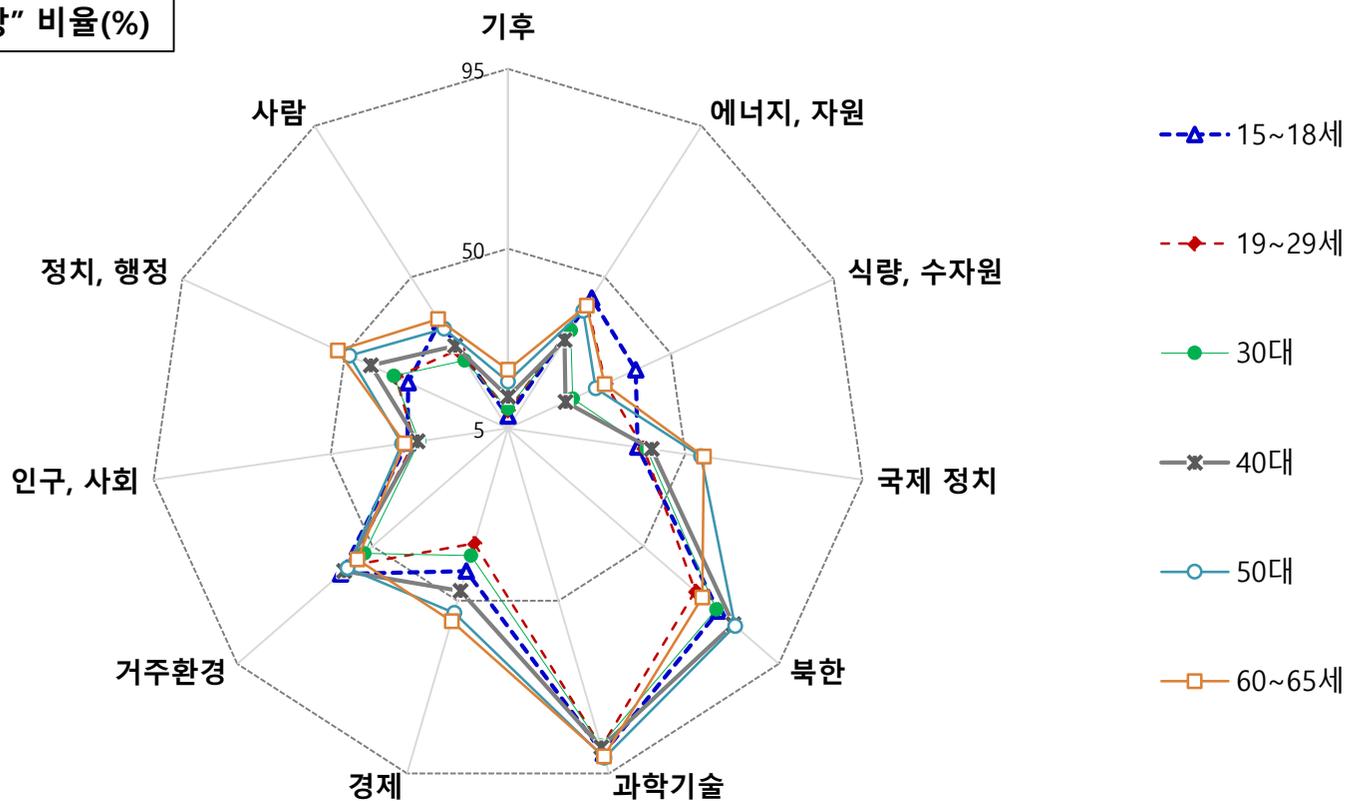


II. 주요 조사 결과

2. 30년 후, 분야별 변화 예상

문. 선생님께서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하여 한국의 미래를 각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세대별 "긍정 전망" 비율(%)



Ⅱ. 주요 조사 결과

3. 미래 정책 방향 선호도(종합)

구분	의견1	(%)	의견2	(%)	GAP
이민정책	노동이민은 가능한 억제	49.0	이민 정책 확대	51.0	2.1
환경정책	플라스틱 제품 소비 규제	53.6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신기술 투자 확대	46.4	7.1
외교안보정책	한-중 우호, 한-미동맹 강화	46.3	미-중 사이에 중재자/균형자	53.7	7.5
부동산 정책	토지공개념 제한적 적용	45.5	토지공개념 대폭 강화	54.5	9.0
복지정책방향	선별복지로 국가 재정부담 완화	54.7	국민 전체 대상 보편복지 실현	45.3	9.5
지방분권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불필요	56.3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추진	43.7	12.5
가족 제도	현재의 가족형태만 인정	40.1	생활공동체도 가족으로 인정	59.9	19.7
빅데이터의 활용	빅데이터 악용 가능성 차단	61.7	빅데이터 적극 활용	38.3	23.3
정치갈등	사회적·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정책	37.4	다원성,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 추진	62.6	25.2
인공지능 노동정책방향	인공지능 개발 통제 정책 불필요	35.8	인공지능 조절·통제하는 정책	64.2	28.4
인공지능 의사결정	인공지능 제한적 활용	66.5	인공지능 적극 확산	33.5	33.0
인프라 정책	생활기반시설 유지·확충	66.6	인구 적은 지역, 생활기반시설 축소	33.4	33.2
기후와 에너지 정책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	66.9	과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33.1	33.8
인간 존엄과 생명기술	생명 기술 엄격한 규제	67.9	생명 기술 적극적 정책 지원	32.1	35.8
안락사	안락사 허용 반대	27.5	안락사 허용 찬성	72.5	44.9
식량자원정책	GMO작물 재배·수입 제한	75.1	GMO작물 재배·수입 허용	24.9	50.3
우주 개발	우주개발 소극적 투자	21.1	우주개발 적극적 투자	78.9	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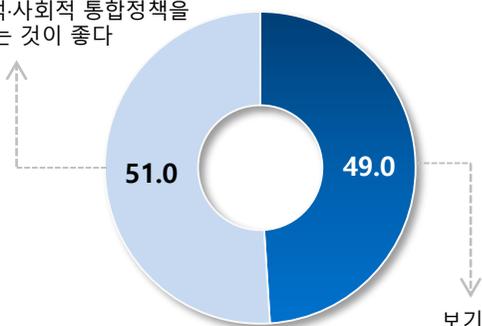
Ⅱ. 주요 조사 결과

3-1. 이민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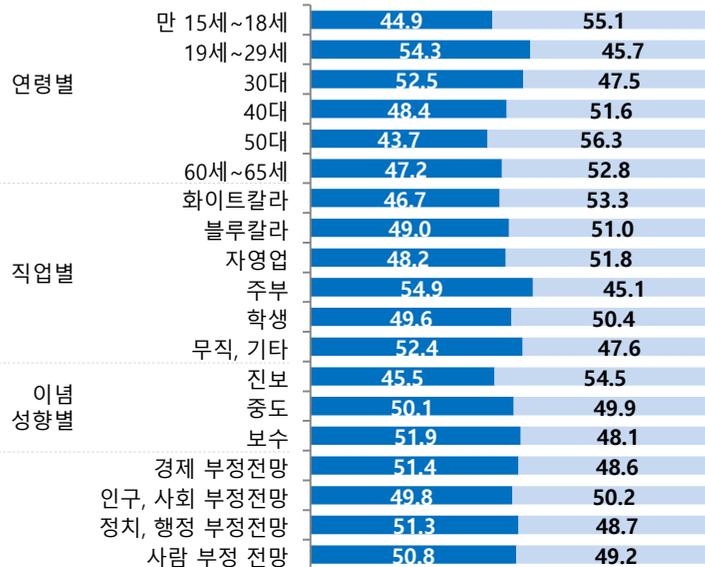
-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 뒤에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해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물론 현재에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되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노동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는 노동이민의 증가로 인하여 인종적·문화적·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민정책의 적극적 수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 정책 방향

보기2.
정년을 연장하고 출산률을 높이거나
기술발전 등을 통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민 정책을 확대하면서
외국인의 문화적·사회적 통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보기1.
이민정책의 적극적 수용에 따른
외국인 증가는 한국 사회에 인종, 문화,
종교 갈등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이민은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 좋다



II. 주요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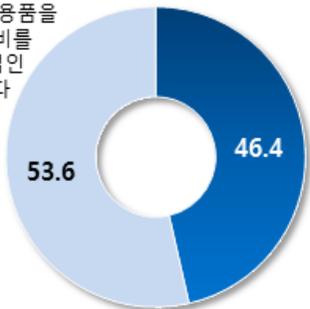
3-2. 환경 정책

- 한반도의 기온과 수온이 상승해 심각한 적조현상이 일어난 바다에 수많은 작은 플라스틱 조각과 미세플라스틱*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미세플라스틱의 독성물질이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켜 시민들은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 홍수, 폭우 등으로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쓰레기 침출수는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킵니다.

※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병이나 쓰레기가 잘게 부서지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

보기2.
신기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값싼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구매를 어렵게 하고, 개인의 일회용품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 소비를 전반적으로 규제해 적극적인 환경 안전 사회로 전환한다



보기1.
현재의 플라스틱 제품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유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신기술(재활용, 생분해, 유해물질 저감 신소재 등) 투자를 확대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인다

연령별	만 15세~18세	61.4	38.6
	19세~29세	53.9	46.1
	30대	47.6	52.4
	40대	43.9	56.1
	50대	41.3	58.7
성별	60세~65세	38.6	61.4
	남자	51.0	49.0
자녀 연령대	여자	41.7	58.3
	자녀 없음	50.4	49.6
	미취학	50.0	50.0
이념 성향별	초/중/고 재학중	44.3	55.7
	20대 이상 성인	39.8	60.2
	진보	43.5	56.5
기후 부정전망 에너지, 자원 부정전망 과학기술 부정전망	중도	48.7	51.3
	보수	44.9	55.1
	기후 부정전망	45.9	54.1
	에너지, 자원 부정전망	46.3	53.7
	과학기술 부정전망	43.8	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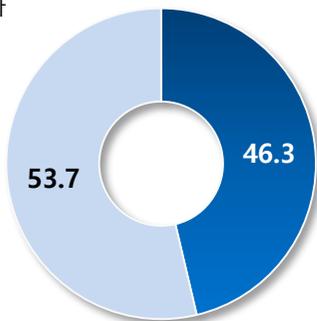
II. 주요 조사 결과

3-3. 외교안보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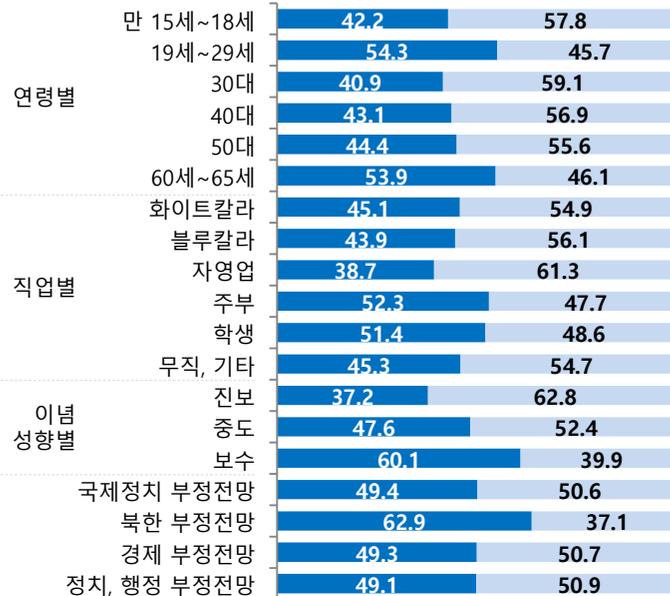
- 미래 국제정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일 것입니다.
- 경제의 폭발적 성장에 발맞추어 군사력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 중국은 육·해·공의 첨단무기를 기반으로 하는 공격력뿐만 아니라 핵무기 전력에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성장은 특히 북한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이 상황에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한-미-일 동맹체제를 이용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중미일 관계 관련 정책 방향

보기2.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재자/균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기1.
경제에서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교안보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주요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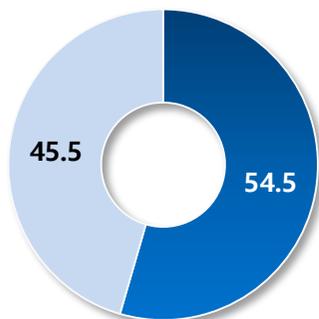
3-4. 부동산 정책

-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개인의 소득보다는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경제성장 기간 동안의 부동산 투기로 지나치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은 청년계층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저소득층,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미래에는 이러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따라서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환수를 통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공개념*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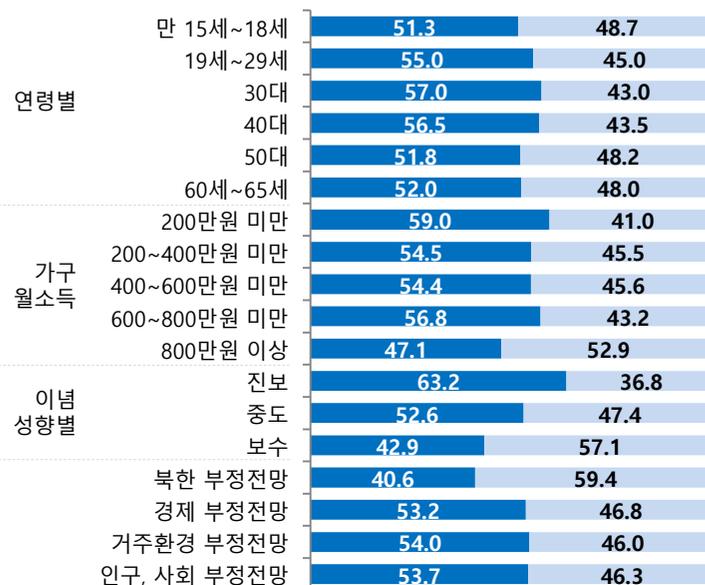
※ 토지공개념 : 토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자원인 만큼 공공의 복리를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거나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다는 개념

부동산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보기2.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거나 보존이 꼭 필요한 지역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보기1.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 전액 환수(양도소득세 강화), 투기용 부동산 소유 제한, 보유세 대폭 강화 등의 정책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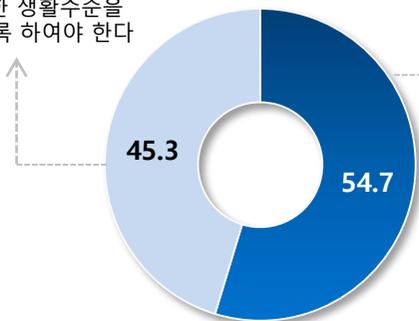
II. 주요 조사 결과

3-5. 복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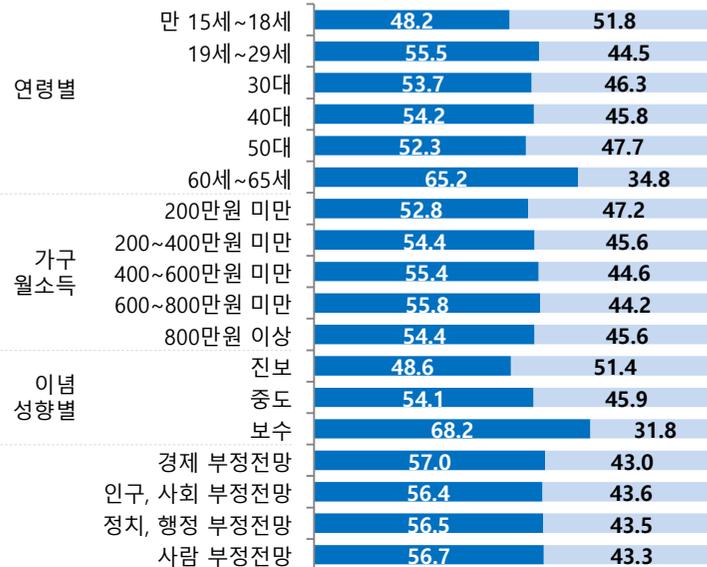
- 저성장시대의 도래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는 우리 경제의 작동원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공지능(AI)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 가계소득 정체가 대표적 사례이며 이로 인해 전통적 고용방식의 해체, 중산층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양상은 현재도 어느 정도 진행 중이며, 미래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리라는 데 일반 대중과 전문가 집단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가계소득 감소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에는 특정 방향으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 시, 국가 복지 정책 방향

보기2.
재정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기본소득과 같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기1.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과
같은 보호 대상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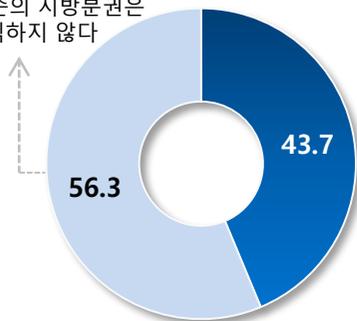
II. 주요 조사 결과

3-6. 지방 분권

- 미래의 한국 사회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다원화·다문화사회가 될 것입니다.
 - 예1) 고령화와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의 인적 구성이 다양화 → 사회정책, 복지정책, 조세·재정정책, 경제·산업정책의 탄력적 변화
 - 예2) 블록체인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 →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증가
- 미래사회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수요와 경제적·사회적 변화의 속도 등을 잘 파악하여 유연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펴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삶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주체적인 역할과 기능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중앙정부 주도에 의한 통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 미래의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화 추진 관련 정책 방향

보기2.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국가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고, 지방정부의 정책능력은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의 수준을 현재보다 높일 필요는 있지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기1.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주민자치 수준 제고 및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점차 이양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령별	42.6	57.4
만15세~18세	42.6	57.4
19세~29세	41.0	59.0
30대	46.1	53.9
40대	48.2	51.8
50대	41.4	58.6
60세~65세	40.5	59.5
지역별	43.5	56.5
서울	43.5	56.5
경기/인천	40.8	59.2
대전/세종/충청	39.5	60.5
광주/전라	47.4	52.6
대구/경북	50.6	49.4
부산/울산/경남	46	54
강원/제주	44.7	55.3
이념 성향별	46.1	53.9
진보	46.1	53.9
중도	44.1	55.9
보수	37.8	62.2
북한 부정전망	38.4	61.6
경제 부정전망	42.9	57.1
인구, 사회 부정전망	42.1	57.9
정치, 행정 부정전망	43.0	57.0
사람 부정전망	41.3	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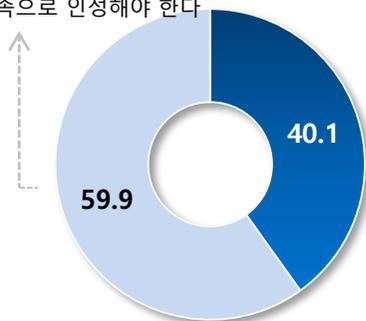
II. 주요 조사 결과

3-7. 가족 제도

- 전통적으로 가족은 남녀의 애정·신뢰를 기반으로 상호부양의무를 지는 부부 관계를 통해 출생한 생물학적 자녀에 의해서 구성되는 생활공동체로 이해됩니다.
- 그런데 미래에는 남녀가 애정·신뢰·부양의 수준이 낮은 파트너쉽을 맺고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부부와 자녀가 애정·신뢰·상호부양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관계나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한 합리적인 목적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편, 동성 커플이 애정·신뢰·부양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이들 커플이 자신들과 유전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아동도 자녀로서 그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공동체에 대한 정책 방향

보기2.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가족과 유사하다면, 혼인·혈연(또는 입양)에 의하지 않은 생활공동체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



보기1.
후속세대의 생산·양육과 상호부양이라는 가족의 본래적·전통적 기능을 고려할 때 혼인·혈연(또는 입양)에 의해서 성립하는 현재의 가족 형태(애정·신뢰·부양의 공동체)만이 가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연령별	만 15세~18세	31.8	68.2
	19세~29세	32.1	67.9
	30대	39.8	60.2
	40대	38.4	61.6
	50대	43.9	56.1
	60세~65세	56.2	43.8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2.2	57.8
	200~400만원 미만	42.7	57.3
	400~600만원 미만	39.9	60.1
	600~800만원 미만	36.8	63.2
결혼 여부	800만원 이상	35.9	64.1
	기혼	46.0	54.0
	미혼	33.3	66.7
이념 성향별	기타	36.4	63.6
	진보	33.8	66.2
	중도	40.0	60.0
	보수	53.7	46.3
인구, 사회	식량, 수자원 부정전망	38.6	61.4
	북한 부정전망	48.0	52.0
	경제 부정전망	42.0	58.0
	인구, 사회 부정전망	39.6	60.4
	사람 부정전망	39.0	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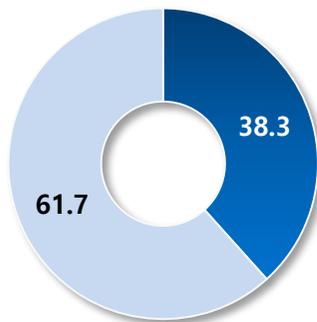
II. 주요 조사 결과

3-8. 빅데이터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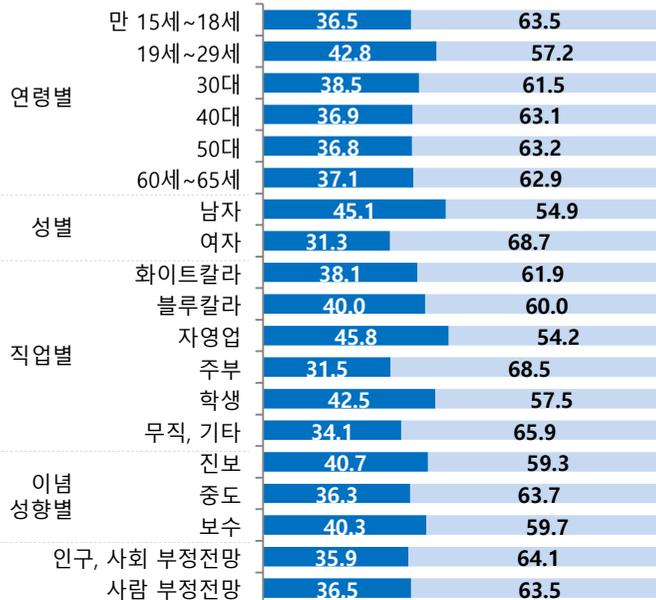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을 통한 급진적인 기술, 교육, 문화, 정치, 사회 등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가공 등을 위한 빅데이터로의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 예1) 고객의 운전패턴, 생활패턴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
 - 예2) 실시간 교통상황, 수신자 상황, 지리적/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최적의 배송 경로 분석으로 기업 경영 프로세스 및 유통 효율성 개선
 - 예3) 스마트 기기 및 센서와 연결을 통해 수집된 개인 건강(칼로리, 식습관, 혈압, 수면 패턴 등) 정보의 다양한 분야 활용(헬스케어, 농수산, 금융보험 등)
- 빅데이터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데이터 독점 및 무분별한 데이터의 수집 등으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 뿐 아니라 기업 또는 국가 간 보안 이슈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정책 방향

보기2.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다양한 편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더라도, 특정 기업, 단체, 정부로 하여금 관리·통제하도록 하여 악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보기1.
빅데이터가 주는 다양한 분야의 활용가치 및 우리 사회에 주는 편익을 고려하면, 비록 악용 가능성이 있더라도 데이터를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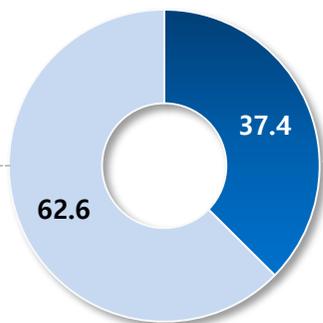
II. 주요 조사 결과

3-9. 정치 갈등

- 한국 사회에서 기존의 갈등은 이념, 경제적 지위를 축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곧 정치적 갈등으로 표출됩니다.
- 하지만 미래 한국 사회에는 새로운 종류의 갈등이 중요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성애 문제, 낙태문제, 외국인 노동자 및 난민 문제, 세대간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 이러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현재에도 존재하지만, 그 갈등의 수준이 미래의 한국에서는 선진국이 겪는 수준으로 심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갈등은 정치적 갈등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고, 기존에 존재하던 갈등과 결합하여 한국 정치의 갈등 수준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정치 갈등 관련 정책 방향

보기2.
사회적·문화적 갈등이 다소 증폭될 위험이 있더라도 사회적 다원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긍정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보기1.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한하기 위하여 사회적·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연령별	만 15세~18세	49.0	51.0
	19세~29세	35.8	64.2
	30대	39.4	60.6
	40대	36.7	63.3
	50대	33.1	66.9
성별	60세~65세	40.9	59.1
	남자	40.1	59.9
이념 성향별	여자	34.5	65.5
	진보	31.4	68.6
	중도	39.6	60.4
부정전망	보수	41.8	58.2
	북한 부정전망	47.7	52.3
	경제 부정전망	39.3	60.7
	인구, 사회 부정전망	37.5	62.5
	정치, 행정 부정전망	41.2	58.8
	사람 부정전망	36.8	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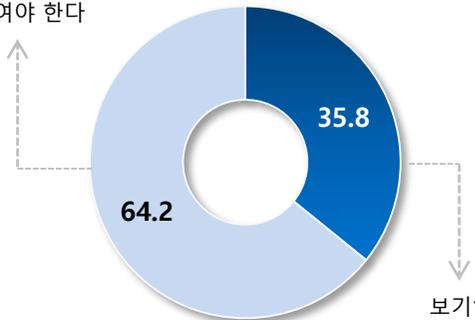
II. 주요 조사 결과

3-10. 노동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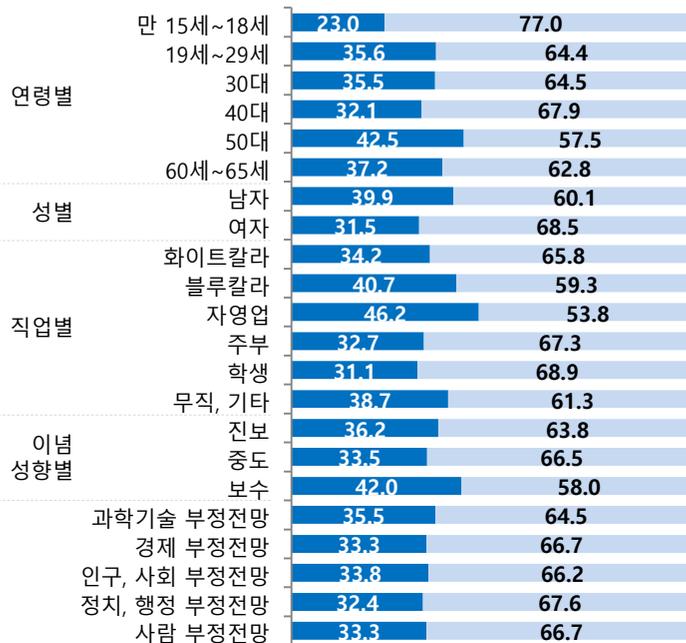
- 저성장시대의 도래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는 우리 경제의 작동원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공지능(AI)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 가계소득 정체가 대표적 사례이며 이로 인해 전통적 고용방식의 해체, 중산층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양상은 현재도 어느 정도 진행 중이며, 미래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리라는 데 일반 대중과 전문가 집단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가계소득 감소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에는 특정 방향으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노동 대체 시, 노동 정책 방향

보기2.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은 인간 노동을 매우 빠르게 그리고 대규모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와 범위를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조절·통제하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보기1.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의 노동이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발달은 새로운 일자리를 낳을 것이고,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인간은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인간 노동 대체에 대한 통제 정책을 취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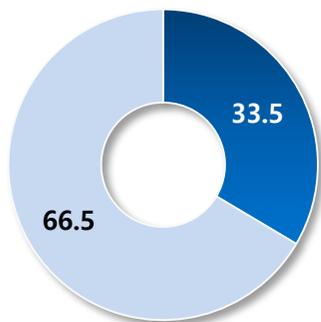
II. 주요 조사 결과

3-11.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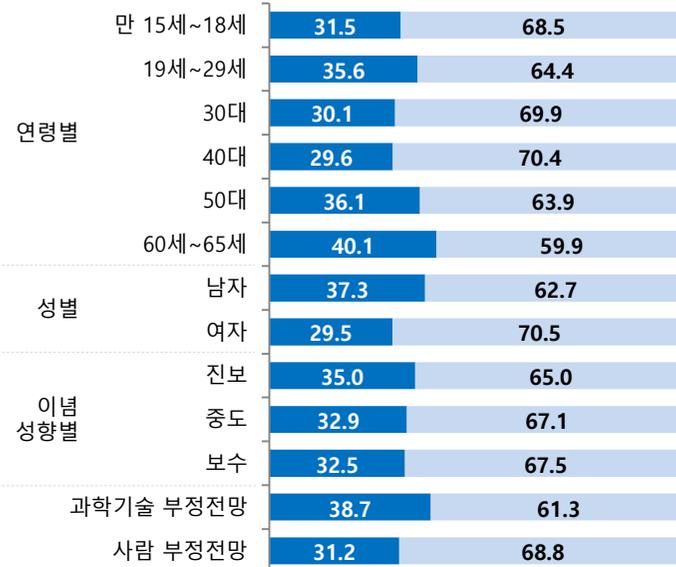
- 미래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판단 기준에 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1) 각종 신체부착 센서를 통해 인공지능이 건강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경고를 주고(사전예방), 병원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해 치료 및 수술 방법이 제안됨 (사후치료)
 - 예2) 법률 문서, 판례 분석, 증거 분석 등 이른바 리걸테크(legal tech)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음 (사례: 美위스콘신주 AI검사 시스템'컴파스'도입)
 - 예3) 교통 정보, 도로 상황, 운전자 상태 등 차량 내/외부 데이터의 종합적 수집 및 판단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완전한 자율주행 실현
-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해 내려지는 의사결정의 품질 및 신뢰도에 따라 향후 인공지능 기술 혁신 속도 및 적용 범위 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

보기2.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및 판단 오류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기 어려워 인간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제한적인 역할로 활용해야 한다



보기1.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인공지능의 오류가능성은 인간에 의한 판단 오류보다는 작으므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확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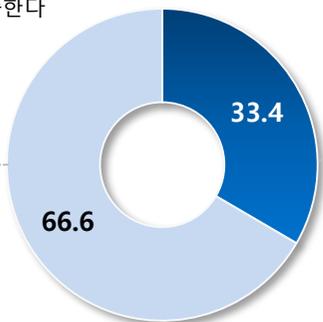
II. 주요 조사 결과

3-12. 인프라 정책

- 인구추계상 2030년부터 우리나라의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감소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절대적인 인구감소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도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도시보다 지방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병원 등과 같은 생활기반시설 이용이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 이러한 지역에서 앞으로 생활인프라 수준을 어떻게 할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기반시설 관리 정책 방향

보기2.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이라도
정주여건의 질을 유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정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생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확충한다



보기1.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에
생활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용이 매우 적으며, 향후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르므로
생활기반시설을 축소한다

구분	구분	축소한다 (%)	지속적으로 유지·확충한다 (%)
연령별	만 15세~18세	36.7	63.3
	19세~29세	32.2	67.8
	30대	34.3	65.7
	40대	30.1	69.9
	50대	36.6	63.4
지역별	60세~65세	32.2	67.8
	서울	37.0	63.0
	경기/인천	35.9	64.1
	대전/세종/충청	33.0	67.0
	광주/전라	25.4	74.6
이념 성향별	대구/경북	35.5	64.5
	부산/울산/경남	26.6	73.4
	강원/제주	36.9	63.1
	진보	28.7	71.3
	중도	35.3	64.7
성향별	보수	36.4	63.6
	경제 부정전망	34.9	65.1
	인구, 사회 부정전망	33.7	66.3
	정치, 행정 부정전망	34.0	66.0
	사람 부정전망	33.6	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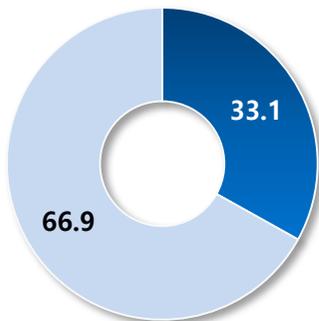
II. 주요 조사 결과

3-13. 기후와 에너지 정책

- 화석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50년까지 한반도 평균기온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여름 일수가 길어지고 폭염과 열대야까지 증가해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이에 따라 우리사회 시민들은 대부분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이 설치된 실내에서 생활하며, 특히 남부지방은 노약자들이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수면은 상승해 농경지가 줄고 녹지가 감소되어 서식지를 잃은 동식물은 아열대성 병충해와 신종감염병에 걸려 개체수가 감소합니다.

한반도 기온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

보기2.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걱정되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점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한다



보기1.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사용비용을 과감하게 늘리고, 이를
위해 시민들은 전기료 인상과 같은
에너지 전환 비용을 부담한다

구분	구분	비율 (%)	비율 (%)
연령별	만 15세~18세	35.1	64.9
	19세~29세	28.2	71.8
	30대	33.6	66.4
	40대	37.4	62.6
	50대	34.1	65.9
가구 월소득	60세~65세	28.7	71.3
	200만원 미만	31.4	68.6
	200~400만원 미만	30.1	69.9
	400~600만원 미만	34.5	65.5
	600~800만원 미만	34.7	65.3
이념 성향별	800만원 이상	37.0	63.0
	진보	40.2	59.8
	중도	31.0	69.0
부정전망	보수	25.5	74.5
	기후 부정전망	32.7	67.3
	에너지, 자원 부정전망	30.9	69.1
	경제 부정전망	30.1	69.9
	정치, 행정 부정전망	29.5	70.5

II. 주요 조사 결과

3-14. 인간 존엄과 생명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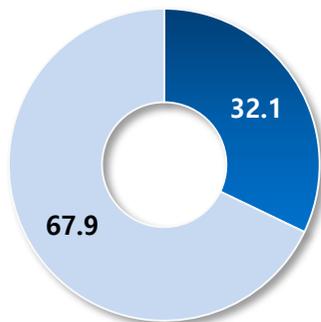
- 미래에는 아이의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조작하는 생명기술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그 시초로 최근 영국에서는 디자이너 베이비(맞춤 아기) 기술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에서 통과된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디자이너 베이비 기술 대상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들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난자 (핵만 추출) + 공여 받은 다른 여성의 난자 (핵 제거) + 아버지의 정자 = 맞춤 아기

- 이렇게 탄생한 아이는 엄마 둘, 아빠 하나를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이런 선택 중 일부는 여전히 혐오감을 주는 반면 어떤 선택은 신중한 육아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에 대한 당신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대하는 정책 방향

보기2.
유전자 선택 및 조작 등 생명 기술의 과도한 활용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보기1.
유전자 선택 및 조작 등 생명 기술은 수명연장, 증강인간의 실현 등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므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연령별	36.7	63.3
15세~18세	36.7	63.3
19세~29세	39.6	60.4
30대	30.6	69.4
40대	29.9	70.1
50대	28.8	71.2
60세~65세	30.1	69.9
성별		
남자	40.4	59.6
여자	23.5	76.5
자녀 없음	33.3	66.7
미취학	34.5	65.5
연령대		
초/중/고 재학중	27.9	72.1
20대 이상 성인	30.2	69.8
이념 성향별		
진보	32.2	67.8
중도	31.0	69.0
보수	35.2	64.8
과학기술 부정전망	33.4	66.6
인구, 사회 부정전망	31.3	68.7
사람 부정전망	30.7	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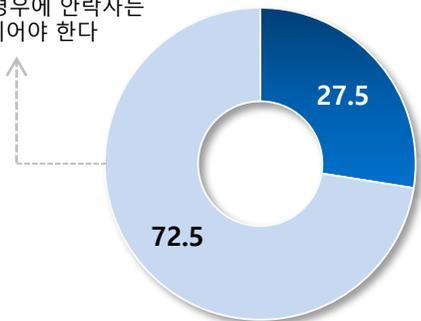
II. 주요 조사 결과

3-15. 안락사

- 의학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임종 직전의 중환자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연명 치료로 생명이 근근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은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견디기 힘든 고통일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이러한 고통을 계속 겪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을 때 의사가 그 죽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존엄사” 제도라고 합니다.
 - 이를 흔히 “안락사”라고도 하지만, 안락사는 존엄사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 ※“안락사”는 말기 임종환자와 달리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 의사의 도움을 얻어서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안락사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미래에는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넘어 150세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단,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여 그 기간 동안 삶의 질도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만성질환과 노화가 완전히 정복된 것이 아닌 이상 병마와 신체기능의 쇠퇴에 따른 고통을 수명이 연장된 만큼 더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 관련 정책 방향

보기2.
고령이나 만성질환 등에 따른 고통으로 인간다운 삶이 어려울 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에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보기1.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귀한 것이기에 말기임종환자에 대한 존엄사와 같이 매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락사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연령별	가구 월소득	이념 성향별	부정전망	긍정전망
만 15세~18세	200만원 미만	진보	과학기술 부정전망	76.6
19세~29세	200~400만원 미만	중도	인구, 사회 부정전망	75.1
30대	400~600만원 미만	보수	정치, 행정 부정전망	67.2
40대	600~800만원 미만		사람 부정전망	70.2
50대	800만원 이상			75.7
60세~65세				72.8
				66.5
				72.5
				73.1
				74.7
				73.8
				76.3
				71.4
				68.4
				69.0
				74.0
				72.7
				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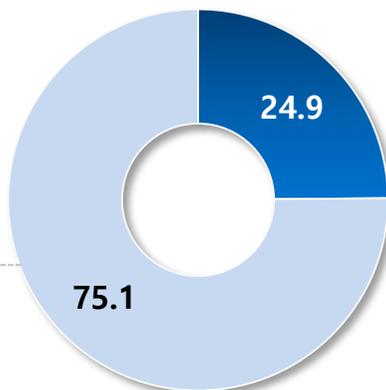
Ⅱ. 주요 조사 결과

3-16. 식량 자원 정책

- 미래에는 경작지 면적 감소, 농업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우리나라의 불리한 농업환경으로 식량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며, 세계정세와 세계 식량시장의 악화에 따라 무역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안정적인 식량확보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 올 경우 우리나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커다란 변화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식량 수급을 위한 정책 방향

보기2.
GMO작물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배·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되며, 대신 농업에 대한 대대적 기술투자와 기업화를 통해 생산성을 어느 정도 높이고, 나머지 식량 부족 상황으로 인한 식량가격 상승은 국민 전체가 감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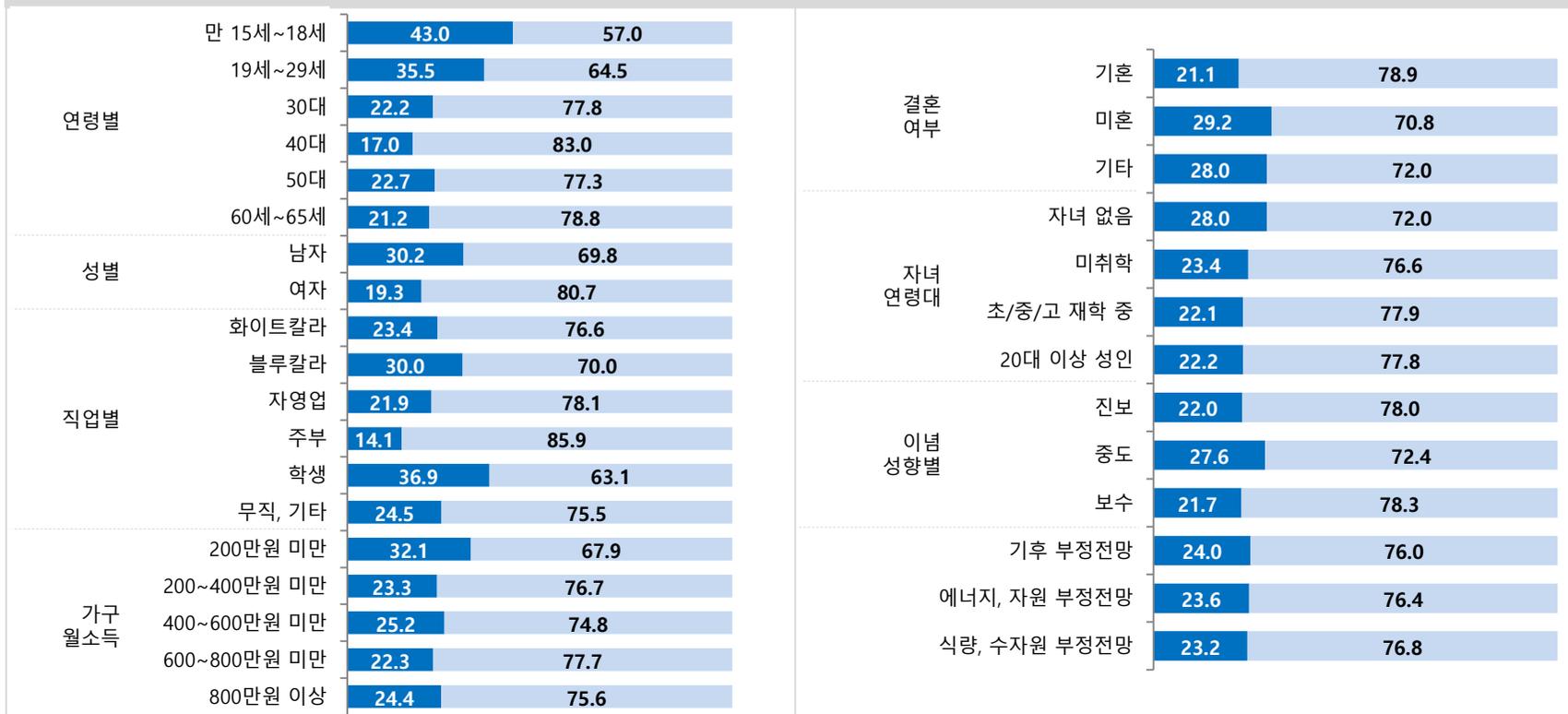
보기1.
유전자편집기술을 활용한 GMO작물이 안전성을 검증 받지 않았지만, 생산력·경제성·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GMO작물 재배·수입을 허용한다

II. 주요 조사 결과

3-16. 식량 자원 정책

- 미래에는 경작지 면적 감소, 농업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우리나라의 불리한 농업환경으로 식량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며, 세계정세와 세계 식량시장의 악화에 따라 무역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안정적인 식량확보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 올 경우 우리나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커다란 변화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식량 수급을 위한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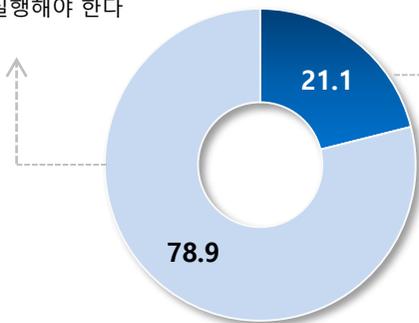
II. 주요 조사 결과

3-17. 우주 개발

- 인공위성 기술의 국제협력과 우주발사체 기술의 발전으로 우주탐사 여건이 좋아져 2050년 인류는 화성, 소행성, 금성, 수성 등 근접 행성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 우주에는 스마트폰, 자동차, 의학, 광학 등에서 사용하는 희토류 금속이 풍부합니다.
- 희토류 금속은 지구 매장량이 많지 않아 전세계적으로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우주개발 기술수준이 앞선 선진국들이 달이나 소행성에 묻혀있는 우주 희토류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앞선 기술로 우주진출에 성공한 소수의 선진국 국민들은 높은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우주 개발에 대한 정책 방향

보기2.
정부는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우주 기초과학 기술 연구개발비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보기1.
우주개발에는 대규모 자금 투자와 실패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우주산업분야의 규제를 없애거나 지금의 과학기술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연령별	만 15세~18세	19세~29세	30대	40대	50대	60세~65세
학력별	31.8	23.4	20.8	20.8	18.6	17.1
이념 성향별	68.2	76.6	79.2	79.2	81.4	82.9
	국졸/중졸 이하	33.3	26.3	18.9	20.6	19.8
	고졸 이하	66.7	73.7	81.1	79.4	80.2
	대학원졸 이하	20.6	79.4	81.1	79.4	80.2
이념 성향별	진보	19.8	21.5	22.1	21.5	22.1
	중도	80.2	78.5	77.9	78.5	77.9
	보수	22.1	77.9	77.9	78.5	77.9
이념 성향별	에너지, 자원 부정전망	21.5	35.6	24.8	21.5	24.8
	과학기술 부정전망	78.5	64.4	75.2	78.5	75.2
이념 성향별	경제 부정전망	24.8	75.2	75.2	24.8	75.2
	경제 부정전망	75.2	75.2	75.2	75.2	75.2

Ⅲ. 요약 및 결론

- **과거 대비 현재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앞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과거 대비 현재의 변화는 ‘경험’, 미래의 변화는 막연한 ‘예측’임에도 큰 변화 예상
 →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에는 전 세대/계층 동의

- **일반국민들이 예상하는 30년 후 미래의 모습은 대체로 “암울”**
 : 11개 분야별 미래 전망 중 ‘기후’, ‘식량/수자원’, ‘인구/사회’ 등 총 8개 분야에서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 절반 이상
 : 그러나 과학기술, 북한, 거주환경에 대해서만 미래 변화를 긍정적으로 예상
 → 기술은 항상 발전하고, 남북은 언젠가는 통일할 것이라는 인식 바탕

- **기후, 식량/수자원, 인구/사회, 사람, 에너지/자원에 대해서는 60% 이상, 정치/행정, 국제정치, 경제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부정 전망**
 :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자원고갈, 환경 오염, 기상이변 등 자연환경과 관련한 부정적 전망 압도적
 →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확실한 위험 요인인 만큼 지금부터 정책을 준비해서 국민의견을 수렴해야하는 분야
 : 주요 국가들의 가장 큰 사회문제인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사회 및 사람(human, 인간관계)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도 회의적 전망 높고, 당연히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 시스템,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전망

(%)	과학기술	북한	거주환경	경제	국제정치	정치, 행정	에너지, 자원	사람	인구, 사회	식량, 수자원	기후
긍정전망	89.1	75.1	57.2	45.0	44.8	42.0	37.7	30.9	29.4	27.6	13.0
부정전망	10.9	24.9	42.8	55.0	55.2	58.0	62.3	69.1	70.6	72.4	87.0

Ⅲ. 요약 및 결론

• 기술의 발전, 환경과 관련된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비교적 뚜렷한 선호 형성

그 외 정치/사회/경제 시스템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 정책 보완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 필요

: 17개 미래정책 중, 응답자의 60% 이상이 선택해 비교적 정책 선호도가 뚜렷하게 확인된 정책은 ‘우주개발’, ‘식량자원정책’, ‘안락사’, ‘인간존엄과 생명기술’, ‘기후와 에너지 정책’, ‘인공지능 의사결정’, ‘인공지능 노동정책 방향’ 등 총 9개이며,

: ‘정치갈등’, ‘빅데이터의 활용’, ‘가족제도’, ‘지방분권’ 정책은 조금 더 선호하는 정책은 있으나, 60% 이상의 지지는 얻지 못한 상태로 사회적 공론화 등을 통해 정책 선호를 지속적으로 확인/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복지정책 방향’, ‘부동산 정책’, ‘외교안보 정책’, ‘환경정책’, ‘이민정책’은 정책 선호도가 비슷하게 높게(40~50%)

나타나는 등 정책 방향 수립/추진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 및 공론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민정책	노동이민은 가능한 억제	49.0%	VS	이민 정책 확대	51.0%
환경정책	플라스틱 제품 소비 규제	53.6%	VS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신기술 투자 확대	46.4%
외교안보정책	한-중 우호, 한-미동맹 강화	46.3%	VS	미-중 사이에 중재자/균형자	53.7%
부동산 정책	토지공개념 제한적 적용	45.5%	VS	토지공개념 대폭 강화	54.5%
복지정책방향	선별복지로 국가 재정부담 완화	54.7%	VS	국민 전체 대상 보편복지 실현	45.3%
지방분권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불필요	56.3%	VS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추진	43.7%
가족 제도	현재의 가족형태만 인정	40.1%	VS	생활공동체도 가족으로 인정	59.9%
빅데이터의 활용	빅데이터 악용 가능성 차단	61.7%	VS	빅데이터 적극 활용	38.3%
정치갈등	사회적·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정책	37.4%	VS	다원성,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 추진	62.6%
인공지능 노동정책방향	인공지능 개발 통제 정책 불필요	35.8%	VS	인공지능 조절·통제하는 정책	64.2%
인공지능 의사결정	인공지능 제한적 활용	66.5%	VS	인공지능 적극 확산	33.5%
인프라 정책	생활기반시설 유지·확충	66.6%	VS	인구 적은 지역, 생활기반시설 축소	33.4%
기후와 에너지 정책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	66.9%	VS	과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33.1%
인간 존엄과 생명기술	생명 기술 엄격한 규제	67.9%	VS	생명 기술 적극적 정책 지원	32.1%
안락사	안락사 허용 반대	27.5%	VS	안락사 허용 찬성	72.5%
식량자원정책	GMO작물 재배·수입 제한	75.1%	VS	GMO작물 재배·수입 허용	24.9%
우주 개발	우주개발 소극적 투자	21.1%	VS	우주개발 적극적 투자	78.9%

Ⅲ. 요약 및 결론

• 과학기술의 발전 및 환경과 관련된 이슈 → 정책 선호 형성

우주개발	일상생활과 다소 먼 주제, 가치 상충이 크게 없는 이슈
식량정책, 생명공학, 안락사	기술적 혜택이 가져오는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 인간존엄의 가치 우선 비교적 장기간 사회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현재 진행중인 이슈 (유전자 조작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
빅데이터, 인공지능(노동, 의사결정)	기술의 활용을 통해 얻는 편익보다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오/남용, 오류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두려움 → 기술에 대해서는 통제, 제한적 활용 선호
기후와 에너지, 환경	부정적 미래를 예상함에도, 당장 기술 개발/투자를 위한 비용 부담, 불편 감수할 의사 없어 안 쓰고, 줄이는 등 소비 자체를 제한하는 소극적 정책 선호

• 정치/사회/경제 시스템과 관련된 이슈 → 정책 선호 불확실

인프라정책	생활기반시설 유지/확충은 일종의 기본권, 경제논리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유지
외교안보정책, 지방분권	일반국민들에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제, 가치 상충이 크게 없는 이슈 →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선호정책 달라질 가능성
정치갈등, 이민정책, 가족제도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은 존중하고 수용해야하지만, 이민확대와 같은 적극적 다문화 정책에는 찬반 매우 팽팽 → 현재 및 미래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다양성"의 수준에 대해 논의 필요
복지정책, 부동산 정책	현재도 여론이 크게 나뉘는, 계층간 이해가 첨예한 이슈

Ⅲ. 요약 및 결론

• 다양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사회 변화를 바람 → 사회문화적 동질성 유지보다는 다양성 확대

가족제도, 안락사, 지역인프라	혈연 중심 가족을 넘어 다양한 유형을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답변이 많았으며, 안락사 허용은 73%로 압도적 찬성, 인구 과소지역의 기반시설 축소보다는 전 국토의 균형발전 찬성
------------------	--

• 비용이 수반되는 제도 변화는 점진적·단계적 추진을 바람

복지정책, 에너지, 지방분권	선별복지로 재정 부담을 완화하자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비용을 고려한 답변, 지방분권화 정책에서 20대와 60대는 다른 세대와 달리 중앙집중을 선호
-----------------	--

• 과학기술의 남용 규제 →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인공지능, 생명기술, 식량자원	특히, 빅데이터, AI, 생명기술,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과학기술 관련 부작용을 우려하는 답변은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	---

• 세대별 차이

20대와 60대의 유사점	놀랍게도 많은 질문에서 비슷한 답변이 나타남(Ex. 선별복지, 한미동맹, 점진적 에너지 전환) →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60대와 비슷하게 보수적 → 고용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20대는 개인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
20대	비혈연 가족 인정, 다양성 추구, 안락사 허용 등 사회 이슈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20대
10대(15~18세)	보수부터 진보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 → 10대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 필요